

한미관계의 맥락에서 본 한국군의 베트남전 철수*

趙 眞 九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는 말
2. 동요하는 한미관계: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
3. 미국의 베트남화정책과 주일한국군의 1단계 철수
4. 미중화해, 북한의 평화공세와 주일한국군의 완전 철수
5. 결론을 대신한 몇 가지 추론

1. 들어가는 말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고 일컬어진다. 1917년 그동안의 중립정책을 버리고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영국과 프랑스 편에서 독일과 싸웠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 이 논문은 2004년 10월 15일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한국군의 베트남전 철수과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추축국을 궤멸시켰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동시에 시작되어 약 50년간 지속되었던 미·소 간의 냉전에서도 승리했지만 유일하게 베트남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미군은 같은 해 3월까지 모두 남베트남에서 철수했는데, 그로부터 2년 1개월 후인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에 의해 사이공이 함락되어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되었다. 미국은 1,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전비를 투여하고 5만 8천명의 전사자와 30만명의 전상자라는 희생을 냈지만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지는 못했다.¹⁾

2005년은 베트남전쟁이 종결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30년의 세월은 베트남전쟁에 관한 우리의 기억을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베트남전쟁은 잊지 못할 전쟁이었으며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남베트남에 파병했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배경에는 파병에 따른 미국의 군사원조 증대와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통해 파병에 따른 대북 방위력 저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베트남 특수)이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실리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지만 1973년 3월 한국군이 완전히 남베트남을 떠날 때까지 약 8년 6개월간 32만여 명의 한국군이 57만여 회의 대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만여 명의 전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8만여 명의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²⁾ 뿐만 아니라, 지난 1999년 9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2000년 4월 『뉴스위크(Newsweek)』가 “서방과 베트남 연구가들은 한국

1) 松岡完, 『ベトナム戦争』(中公新書, 2001), pp. i - iv.

2) 이선호,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과 민간인 피해의 진상,” 채명신·양창식·박경석·이선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베트남참전전우회, 2002), pp. 423-424.

군이 학살한 양민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양민살해 사례는 없었다고 부인했다.³⁾ 2001년 8월 23일 한국을 방문 중이던 트란 득 루옹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자, 베트남전쟁 참전 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전 파병이 ‘용병’이었는지, ‘정의의 십자군’이었는지 밝혀 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⁴⁾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베트남정부는 양국의 불행했던 과거가 현재의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반기지 않고 있다.⁵⁾ 그렇다고 한국군의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베트남측의 희생이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았던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의 뒷받침 없이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증언만으로 한국군의 야만성이나 비인도성이 폭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40년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모두 알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40년 전에 이루어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정당성 여부나 공과에 대한 일방적이고 단락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케네디 정권에 이어 존슨 정권의 국방장관으로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맥나마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베트남에 관한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미국이 중시하는 원칙과 전통에 입각해 정책을 결정했지만, 거기에는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치나 의도에 있어서가 아니라 판단과 능력에 있어서의 잘못이었으며, 왜 그랬는가를 후세대에게 설명해야

3) 『한겨레 21』, 1999년 9월 2일(제273호); 『조선일보』, 2000년 4월 4일.

4) 김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루옹 주석은 “한국의 참전으로 베트남인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문화일보』, 2001년 8월 24일; 『동아일보』, 2001년 8월 27일.

5) 이용준,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조선일보사, 2003), pp. 44-47.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 어떠한 정책이든 실행과정에서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40년 전에 이루어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문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한국군의 참전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국군의 철수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부의 공식 전사라고 할 수 있는 『派越韓國軍戰史(1972. 1~1973. 3) 第十卷』가 1985년에 편찬되어 제8장에 철수 경위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이며, 이것도 1990년 12월 군사대외비에서 해제될 때까지 민간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1996년 국방군사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越南派兵과 國家發展』에서도 파병 결정과정이나 파병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철수 과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사를 요약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⁷⁾

이 분야의 선행연구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2년 4월에 발표된 이미숙의 논문이다.⁸⁾ 이미숙은 국방부 및 주월한국군사령부 작성 문서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철수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한국군이 담당할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즉, 이미숙은 “한국군이 철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철수방침을 결정하고, 미·베트남과 철수관련 실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할 역할은 성공적인 철수를 이끌어낸 결정

6) Robert S. McNamara with Brian VanDeMark,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New York: Times Books, 1995), p. x vi.

7) 『派越韓國軍戰史(1972.1~1973.3) 第十卷』(國防部, 1985); 『越南派兵과 國家發展』(國防軍史研究所, 1996).

8) 李美淑, “베트남 戰爭時 韓國軍의 撤收決定過程,” 『軍史』 第45號(2002. 4), pp. 107-142.

적인 축”이었으며, 한국군의 철수는 “우리 군이 대미의존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전력을 증강시키려는 한국군의 자주 국방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군’은 현지의 주월한국군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을 포함한 것이며, 현지 사령부의 정세보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의 현지방문 결과보고나 건의가 한국정부의 철수방침 결정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국군의 철수문제는 당시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미 속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정부 지도자들 사이에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국정부의 공식문서를 필자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물론 철수 관련 군사실무협의 과정에서 주월한국군이 최대한의 물자와 장비를 휴대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은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1971년 1월 박 대통령의 주월한국군 철수 표명 이후 “우리군은 즉각적인 철수보다는 철수시기를 조정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잔류, 협의된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보장 등을 받아냈다”는 지적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계속잔류나 한국군 현대화 계획 지원 문제는 닉슨 정권이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측이 미국에 요구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주월한국군의 철수문제를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한미동맹의 문맥에서 본다면 주한미군 감축 이외에도 닉슨 정권이 베트남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닉슨 대통령 스스로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던 것은 한국정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1960년대 중반 존슨 정권이 베트남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가고 이에 호응하여 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형성된 긴밀한 협력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의 한미관계는 매우 불안정했으며 갈등의 측면이 보다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주로 닉슨 정권이 출범하는 1969년 1월부터 1973년 3월 한국군이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과정을 한미관계의 문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닉슨 독트린과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와 한국군 현대화 문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 정책과 미·중 화해 등이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들이 주월한국군 철수문제와 관련한 한·미 교섭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한국과 미국에서 공개된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요하는 한미관계: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 간의 ‘밀월 관계’는 한국이 두 번째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1966년 가을부터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격화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마닐라 참전국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존슨 대통령은 1966년 10월 31일 서울에 도착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1960년 6월에 방한했던 아이젠하워에 이어 두 번째였다. 공교롭게도 존슨 대통령이 서울에 머물고 있던 11월 2일 북한군이 휴전선 부근의 미 제2사단 지역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중앙정보국은 존슨의 방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1966년 가을부터 북한의 대남 침투양상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⁹⁾ 더구나 한국은 이미 두 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전투부대의 추가적인 파병을 희망하고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1967년 8월 초에 테일러와 클리포드를 서울로 보낸 데 이어 12월 초에는 존슨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나 사이공주재 미

9)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1968,” 『아세아연구』(제46권 4호, 2003년), p. 244.

국 부대사인 로크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 전투부대의 추가적인 파병을 요청했다. 북한의 도발격화와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안보 공약과 한국군현대화 지원을 기대하면서 추가파병에 동의했지만, 1968년 1월에 발생한 청와대 습격미수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파병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국과 그것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미국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한·미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미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존슨 대통령은 밴스 전 국방 부(副)장관을 특사로 파견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군사원조를 약속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미 불신감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국도 밴스의 권고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한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무부의 정책기획위원회는 1968년 6월 16일 주월한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해 한국군을 강화하는 대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담은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미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11월 5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험프리 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정책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¹⁰⁾

닉슨은 아이젠하워 정권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외교전문가였으며, 1967년 10월 외교전문 잡지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했다.¹¹⁾ 또한 1968년 5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의 선거유세에서 닉슨은 “우방 국가들의 자유가 공격 위협에 직면할 때 우리

10) 조진구, “존슨 정권 후반기의 한미관계: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제19권 제3호, 2003년), pp. 83-110.

11) Richard Nixon, “Asia After Vietnam War,” *Foreign Affairs*, Vol. 46, No. 1(October 1967), pp. 113-125.

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할 것”이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싸우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10월 7일 UPI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닉슨은 베트남전쟁의 부담을 미국에서 남베트남으로 이양하고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언명했다.¹²⁾ 이것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 이상 아시아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국내에서 인플레이를 유발시키고 재정적자를 누적시켰던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었다.¹³⁾

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군하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던 중국과의 화해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었던 닉슨의 생각은 정권 출범 후 더욱 구체화되었다. 1969년 4월 21일 로저스 국무장관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닉슨 정권의 아시아 정책의 목표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베트남전쟁의 주력을 미군에서 남베트남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¹⁴⁾ 또한 6월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드웨이에서 열린 미월 정상회담에서는 2만 5천명의 미군철수가 합의되었다.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아시아와 루마니아를 순방했던 닉슨은 7월 25일 중간기착지인 괌에서 신정권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수행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미국은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가 자국 방위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이것이 소위 ‘괌 독트린’이다. 이것은 이듬해 2

1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라 함), 1969-1976, Volume I (Washington D. C. : USGPO, 2003), pp. 48-50.

13) 닉슨이 대통령에 취임한 1969년 1월 미국의 국방비는 약 800억 달러로 1964년(약 540억 달러)보다 1.5배 늘어났으며 1968년의 재정적자는 252억 달러에 달했었다(전년도는 78억 달러였음). 村田晃嗣, 『大統領の挫折カーター政権の在韓米軍撤退政策』(有斐閣, 1998), p. 51.

14) *FRUS*, *op. cit.*, pp. 78-79.

월 18일 미 의회에 제출된 외교교서를 통해 ‘닉슨 독트린’으로 공식화되었는데, 닉슨은 교서에서 미국은 자유세계 모든 국가들을 방위할 수는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닉슨은 미군의 적정 병력수준과 목적, 방위 전략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어느 국가도 미국의 영원한 적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강한 의욕을 표명했다.¹⁵⁾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미국의 아시아 동맹 국가들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1969년 4월 15일 미군 정찰기가 북한 공군에 의해 격추되어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미국의 태도는 한국 정부의 불만의 표적이 되었다. 레어드 국방장관과 로저스 국무장관은 신중한 대응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베트남에 관여하는 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전쟁을 할 자원도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닉슨 대통령도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7일 전투기 호위하의 정찰비행 계속을 지시했을 뿐이다.¹⁶⁾ 실제로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소 양국, 지중해 및 쿠바 상공에 대한 정찰비행은 사실상 중지되었는데, 키신저는 당시 미국이 북한의 전투준비태세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다고 술회했다.¹⁷⁾ 이러한 신 정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더해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꺾임 독트린은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샌프란시스코로 초청했으며, 로저스 국무장관을 한국에 보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이에 한국정부는 1969년 6월 7일자 국방장관 명의의 서신에서 통상적인 군사원조와는 별도로 특별군사원

15) 꺾임 독트린 및 닉슨의 외교교서의 주요내용은 *Ibid.*, pp. 91-92, 195-203.

16) Richard Nixon, *The Memories of Richard Nixon*(New York:Grosset & Dunlap, 1978), pp. 382-385.

17) Henry Kissinger, *White House Years*(Boston: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 318.

조를 통해 한국군의 장비를 개선하고 대간첩작전 장비를 개선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7월 31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로저스는 한국의 요청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반면 팜 독트린으로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약화되지 않는까 하는 한국정부의 우려에 대해서 로저스는 8월 1일 박정희와의 단독회견에서 미국은 아시아 문제에 직접 병력을 투입하여 개입하지 않겠지만 한국은 예외라고 말하면서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⁸⁾ 이것은 8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8월 21일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닉슨은 한반도 정세와 베트남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베트남문제에 대해서도 박정희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던 한국에게 닉슨의 주한미군 계속주둔 확인은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박정희는 남베트남 정부의 철수 요청이 없는 한 한국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¹⁹⁾

그러나 박정희와의 회담에 앞서 닉슨은 포터 주한미국대사에게 자신이 밀즈 하원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조만간 이에 관한 훈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²⁰⁾ 이미 미국 정부 내에서는

-
- 18)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장관-로저스 국무장관 면담요록(1969. 7. 31),’ ‘로저스 장관에게 전달한 외무부 장관의 1969. 7. 31자 각서,’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 면접 요지(단독회견), ‘로저스 미 국무장관 내한시의 토의 안건,’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69. 7. 31-8. 1(마이크로필름 번호 C-0035),”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 19) 21일 열린 자료회담에서 최규하 외무장관도 미국과 남베트남정부의 철수 요청이 있거나 평화회담에서의 합의가 없는 한 한국군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한미정상간 단독회담록 및 양국 각료 회의록,’ ‘대통령 각하 공식 방미에 있어서의 한미 각료회담 회의록,’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9. 8. 20-25 전3권, V.1 기본문서철(마이크로필름 번호 C-0033),”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 20)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편(서울대학교 한·미관계연구회 역), 『프레이저 보고서』(실천문화사, 1986), p. 98; 村田晃嗣(1998), p. 64.

닉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국방부, CIA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 그룹이 결성되어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한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었으며, 키신저 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이 그 책임자였다. 이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70년 1월 20일 레어드 국방장관은 김동조 주미대사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군을 철수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원조를 증액하는 것이 닉슨 독트린의 일부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김동조 대사는 그린 국무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어 레어드 장관의 주한미군 철수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군사원조 증액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린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²¹⁾

그렇지만 미국 정부 내의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다. 대통령에게 전달된 NSC의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감축 보류는 선택지에서 빠져 있었으며, 감축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1개 사단 철수, 2개 사단 철수, 몇 개 여단만의 잔류 등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닉슨은 NSC의 조언에 따라 1개 사단 2만명의 철수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방침이 1970년 3월 20일 국가안전보장결정각서(NSDGM)-48의 형태로 하달되었다. 1개 사단을 철수하고 전방에 있던 나머지 1개 사단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 골자였으며, 그 대신 미국정부는 1971년부터 5년간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위해 매년 2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하고 주월한국군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가

21) Deptel 013877(1/29/1970), Subject: MAP and U. S. Force Level,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Numeric Files, 1970-1973, Political and Defense, Box, #1861, National Archive 2, College Park, Maryland(이하 Box 번호만 표기함). 미국 외교문서 중 전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Deptel : 국무부에서 대사관으로 보낸 전문, Embtel : 대사관에서 국무부로 보낸 전문, 013877 : 전문번호, 1/29/1970 : 전문 작성 일시.

지 주한미군을 더 이상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²²⁾

미국은 이러한 감축이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3월 27일 포터 대사를 통해 미국정부의 방침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데, 예상대로 박정희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닉슨에게 보낸 4월 20일자 친서에서 박정희는 북한이 전쟁준비를 끝내고 “결정적인 시기의 도래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감축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월 21일 이런 내용의 친서를 전달받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포터에게 박정희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닉슨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상기시키면서 1975년 이전의 주한미군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대신 전방의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한국군을 전방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²³⁾ 닉슨은 5월 26일자 회신을 통해 미국정부는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설득하지만, 박정희는 한국군 현대화에 관한 미국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하게 저항했다. 다만 6월 15일자 친서에서 박정희는 군사, 경제 및 외교적인 사전 보장조치가 한·미 간에 합의되면 4월 20일자 친서에서 밝힌 1975년 말까지 철수불가 입장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미국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²⁴⁾

하지만 1971년 6월말까지 주한미군 2만명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정부의 기본방침은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22) 『프레저 보고서』, pp. 100-101.

23) 한국외교문서, ‘외무부 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문(1970. 4. 20), 제목: 대통령 각하의 “닉슨” 대통령 앞 친서 전달,’ ‘대통령 각하와 포터 주한 미 대사와의 면담록(1970. 4. 21),’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1970-71. 전8권(V. 1 기본문서, 1970. 4-8)(마이크로필름 번호 G-002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24) 한국외교문서, ‘주한 미국대사 면접 요지(1970. 5. 29),’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1970. 6. 15),’ *Ibid.*

대외군사원조를 삭감하라는 의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 현대화 지원문제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특히 1970년 4월 9일 타이딩스 상원의원은 한국은 미군의 도움 없이 북한의 어떠한 침략에도 대처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²⁵⁾ 이러한 의회의 분위기가 한국 국내에 전해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국이 닉슨 독트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주한미군 1개 사단 감축에 대해 미국정부의 통보가 있었는가를 묻는 질의서를 정부에 잇달아 보냈다.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등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6월 4일자로 보낸 답변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은 베트남,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병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비춰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사단의 감축을 일방적으로 통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inconceivable)' 일이라고 답변했다.²⁶⁾ 김동조 주미대사도 미국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검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미국으로부터 그런 제의는 없었다고 부정했다.²⁷⁾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방침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조하면서 한국군 현대화가 주한미군 철군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7월 3일 베트남참전국 외상회의 참석차 사이공을 방문한 최규하 외무장관은 로저스 국무장관을 만나 최근의 긴밀해진 조·중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와 유사하며 1970년대 초반의 2~3년간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감축되어서는 안 되고, 감축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먼저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로저스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

25) 『프레지저 보고서』, pp. 103-104.

26) Airgram-288(6/23/1970), Subject: President Park's Replies to Opposition Questions on US Troop Withdrawal, Box #2425.

27) 『동아일보』, 1970년 6월 18일.

게 이해해야 한다고 응수했다.²⁸⁾ 한·미 간의 사전교섭을 통해 한국정부의 협조를 얻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로저스 국무장관을 통해 최규하 장관에게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통보했으며, 7월 8일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²⁹⁾ 이에 정일권 총리는 7월 11일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2만명의 감축계획을 통고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13일에는 주한미군 감축교섭에 앞서 한국군현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교섭 결과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각은 언제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³⁰⁾

사실 1970년대 후반까지 철군을 연기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정 총리의 발언은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교섭전술의 일환이며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을 얻어내면 사퇴 위협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호놀룰루 국방장관 회담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³¹⁾ 7월 21일과 22일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국방각료회담에서는 한국군 현대화 지원 방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펼쳐졌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패커드 차관은 1억 4천만 달러의 통상적인 군사원조 외에 미국은 군사원조를 추가로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철군하는 2만명의 장비도 한국군에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정래혁 장관은 5년간 매년 2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해안경비 강화를 위해 1개 대대분의 S-2 초계기를 제공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래혁은 위와 같은 군사적인 조치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감축

28) Embtel Saigon 10735(7/6/1970), Box #2421.

29) 『동아일보』, 1970년 7월 9일.

30) Embtel 3660(7/14/1970), Box #2425.

31) *Ibid.*

쇼크를 완화하고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유사시 지상군을 포함한 미군의 재전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보장이 없는 한 한국은 어떠한 철군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³²⁾ 결국 주한미군 삭감에 수반하는 한국군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호놀룰루 회담은 한·미 간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났다.

한국군 현대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고위군사실무자회담에서 논의되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에 8월 3일 포터 대사는 마이켈리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박정희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합동계획 수립을 재차 설득했지만, 박정희는 한국군 현대화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안전보장에 관한 보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삭감계획은 실행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포터가 한국군 현대화에 대해 닉슨 대통령이 가능한 보장을 하고 방위공약을 거듭하여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또다시 보장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박정희는 1969년 8월의 정상회담에서 닉슨 독트린은 한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닉슨의 발언과 한국군 2개 사단이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동안 한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비치 장군의 서한을 예로 들면서 미국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³³⁾

결국 미국은 애그뉴 부통령을 서울로 보내 박정희 설득에 나서지만, 한국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8월 24일부터 3일간 세 번에 걸쳐 애그뉴를 만난 박정희는 ‘선 보장, 후 감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32) CINCPAC DTG 230548Z(7/23/1970), Box #1862.

33) Embtel 4044(8/4/1970), Box #2429. 김성은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1966년 1월 18일자 서한에서 비치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 전투부대를 남베트남에 추가 파병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미국정부가 부담하며,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의 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國防史 3』 1961. 5~1971. 12』(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0), pp. 454-455.

특히 박정희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축에 앞서 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장비의 내용, ② 감축 후 잔류 미군의 계속 주둔, ③ 북한이 남침시 즉각적인 미군의 지원 등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그뉴는 자신은 추가감군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군사원조의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고 물려서지 않았다.³⁴⁾ 더욱이 8월 26일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는 기내에서 애그뉴는 한국군 현대화가 끝나는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은 모두 철수될 것이라는 부주의한 발언을 했으며, 다음 날 국방부가 197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해 이미 1만명이 철수했다고 발표하자 한국의 대미불신은 더욱 증폭되었다.³⁵⁾

미 행정부에게 있어서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더해 의회의 동향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정부는 1971년 6월까지 한국에서 2만명, 태국에서 1만 6천명, 필리핀에서 6천명, 남베트남에서 26만 5천명의 미군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5억 달러의 추가군사원조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의회가 이를 승인할 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추가군사원조 요구액 중 한국을 위한 1억 5천만 달러의 승인이 늦어지자 닉슨 대통령을 비롯해 로저스 국무장관과 레어드 국방장관이 나서서 의회에 추가군사원조의 승인을 요청해야 했으며, 12월 22일이 되어서야 미 의회는 대한 추가군사원조안을 승인했다.³⁶⁾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제7사단 제1여단 사령부의 폐쇄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1971년 2월 6일 한·미 양국은 “상호이해와 긴밀한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한국군현대화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제반조치에 관해 만족스러운 회담을 완료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34) 한국외교문서, ‘대통령 각하와 “애그뉴” 미 부통령간의 면담 요록,’ “Agnew, Spiro T. 미 국 부통령 방한, 1970. 8. 24-26. 전2권(V. 1 기본문서철)(마이크로필름 번호 C-004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35) 『프레지저보고서』, p. 108; 『동아일보』, 1970년 8월 28일.

36) 村田晃嗣(1998), pp. 71-72.

했다.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약 15억 달러의 군사원조 및 군사판매차관을 제공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⁷⁾

그렇지만,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명확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원조는 최소한 5년간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던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통상적인 군사원조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미 의회가 승인한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군사원조는 1971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초년도분에 지나지 않아 2차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³⁸⁾ 뿐만 아니라,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 대가로 중단했던 군사원조 이관의 재개를 한국측에 제안했다. 군사원조의 보다 많은 부분을 전투장비 구입에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한국군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한국정부는 미국측 제의를 받아들였다. 3월 18일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와 레빌(Revelle) 주한미원조사절단 부대표는 1971년부터 3년간 6,250만 달러를 이관하기로 합의했으며, 3월 25일에는 한미군사실무자합동회의에서 이관 품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³⁹⁾ 이틀 후인 3월 27일 미 제7사단의 철수가 완료되어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은 일단락되었으며, 휴전 18년 만에 판문점을 제외한 휴전선 전 지역이 한국군 관할하로 들어오게 되었다.

37) 서울신문사 편저, 『駐韓美軍 30年』(행림출판사, 1979), pp. 363-366.

38) 『프레저보고서』, p. 111.

39) 한국외교문서, ‘會議合議覺書,’ ‘軍援移管再開問題에 관한 對美交渉方針(案)(1971. 2. 26, 외무부), “국군 현대화 계획, 1971(마이크로필름 번호 G-002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Airgram-149(4/13/1971), Subject: Letters and Understanding Related to measures for Expediting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Box #1862.

3. 미국의 베트남화정책과 주월한국군의 1단계 철수

이상과 같이 우여곡절을 거쳐 주한미군 1개 사단 약 2만명이 감축되었지만, 한·미 간의 교섭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주월한국군의 거취를 사실상 연계시키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9년 8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주월한국군의 철군계획이 없음을 닉슨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미국정부로부터 주한미군의 감축을 일방적으로 통고받은 이후에도 이런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⁴⁰⁾ 그러나 야당은 주월한국군의 철수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1970년 8월초 사이공을 방문했던 신민당의 유진산 당수는 “한국민과 주월한국군의 노고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월한국군의 철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⁴¹⁾ 또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는 10월 30일 외신기자 클럽 초청연설에서 “더 이상 불행이 야기되기 전에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서 철군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으며, 나아가 12월 27일 평택 유세에서 베트남의 상황이 변하면서 미군도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능한 한 빨리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⁴²⁾

베트남전쟁이 불만족스런 형태로 끝나면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압

40) 야당의 박병배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남베트남군이 충분히 강력해지거나 상황이 변화하면 남베트남 및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월한국군의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런 내용은 박병배 의원에 의해 8월 31일 공개되었다. Airgram-403(9/25/1970), Subject: President Reaffirm Present Policy as Road to a Bright Future, Box #2423.

41) 8월 6일 유진산 신민당 당수와의 회담에서 남베트남의 티우 대통령은 남베트남군이 현대 화되고 자주국방이 이룩되는 2, 3년 뒤까지 우방국의 군대는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주월 한국군의 철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1970년 8월 7일.

42) 『동아일보』, 1970년 10월 31일; Embtel 6772(12/29/1970), Box #2425.

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던 한국정부는 교섭에 의한 해결보다도 완전한 군사적인 승리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태국 등 다른 파병국가들이 철군시키거나 철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⁴³⁾ 8월 20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약 900명의 제8대대를 11월 12일까지 철수하는 대신 남베트남에 약 36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⁴⁴⁾ 또한 태국주재 한국대사는 11월 19일 타놈 수상이 주월태국군 1만 2천명을 1972년 말까지 완전히 철수시키되 우선 1971년 말까지 6천명을 철수할 계획이며, 남베트남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외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외무부는 주월대사에게 태국군의 철군 시기와 규모 및 남베트남 정부의 반응에 대해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12월 9일 주월대사는 태국정부는 1971년 2월부터 점차적으로 감군하여 1971년 중으로 우선 파월병력의 1/2에 해당하는 6천명을 철수할 것이며, 철수방법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교체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⁴⁵⁾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정부가 주월한국군의 철수를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철군에 대비해 내부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⁶⁾ 한국정부가 주월한국군의 단계적 감축을 고려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1971년 1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였다. 박정희는

43) Airgrma-131(3/13/1970), Subject : U. S. Assessment- Republic of Korea 1970, Box #2429.

44) Stanley R. Larsen and James L. Collins, Jr.,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Army, 1975), p. 103.

45) 한국외교문서, '전문번호WAU-1210(외무장관이 주호주대사에게 보낸 전문),' '전문번호WVN-1218(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 '전문번호VNW-1241(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요약)주월 태국군 철수에 관한 주월대사 보고(주월 태국대사와 면담, 확인),' "주월남연합군 철수, 1970(마이크로필름 번호 G-0019),"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46) 이세호 주월한국군사령관도 1970년 11월 11일자 '정기 정세보고'에서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주월한국군을 철수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한 바 있다. 『派越韓國軍戰史(1972. 1~1973. 3) 第十卷』, p. 428; 이미숙(2002), p. 112.

“월남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월남군의 전투력도 급속히 증강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월군의 단계적인 감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월남, 미국 등 연합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했다.⁴⁷⁾ 2월 26일자 ‘군원기관 재개 문제에 관한 대미 교섭 방침(안)’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제1단계로 잔류병력 규모가 ‘2개 사단+미’의 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이것은 해병 제2여단의 철수를 의미함) 1971년 말까지 철수시키되 구체적인 철수병력의 규모와 시기는 외무부가 미국과 교섭을 하고, 군사적인 문제, 특히 미국정부가 주월 한국군에게 제공한 장비의 휴대문제나 복원비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교섭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무부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국방부나 합참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⁴⁸⁾ 따라서 외무부와 국방부 사이의 내부 조율 과정에서 철수 규모와 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1971년 4월 13일 한국정부는 1971년 10월부터 1972년 6월까지 1개 전투사단을 철수한다는 제1단계 철수계획을 남베트남 정부에 통보했다.⁴⁹⁾ 이것은 제9사단 1만 4,162명, 제100군수사령부 2,452명, 주월군사령부 386명 등 총 1만 7,000명을 1972년 6월까지 철수해 주월한국군 병력수준을 3만 86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합참의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최규하 외무장관은 4월 19일 주월한국군 감축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우선 1개 전투사단을 ‘멀지 않은 장래’에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⁵¹⁾ 또한 4월 22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베트남 참전국외상회의에서 다른

47) 『동아일보』, 1971년 1월 11일.

48) 한국외교문서, ‘軍援移管再開問題에 關한 對美交涉方針(案)(1971. 2. 26, 외무부),’ “국군 현대화 계획, 1971(마이크로필름 번호 G-002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49) 한국외교문서, ‘주월 국군 철수 관련 일지(동남아 2과, 작성일자 미상),’ “주월남 한국군 철수, 1973(마이크로필름 번호 G-003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50) 『派越韓國軍戰史(1972. 1~1973. 3) 第十卷』, p. 428.

51) 『동아일보』, 1971년 4월 19일.

참전국 외무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미국은 주월한국군의 단계적인 철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주월미군의 감축계획과 베트남군에의 임무이양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남베트남은 철수 보류를 요청했다.⁵²⁾ 4월 22일 최규하 장관과의 회담에서 남베트남의 트람 반 람 외무장관은 철수계획을 1년 연기해 1973년 초까지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5월 초 대통령 특사로 사이공을 방문했던 심홍선 합참의장에게 티우 대통령은 1973년까지 계속 주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월미군의 철군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베트남군의 실질적인 증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한국군 담당 작전지역의 중요성과 철수하는 한국군의 공백을 남베트남군으로 충원하는데에 막대한 병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작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남베트남 정부가 철수 연기를 요청하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의 철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6월 3일 1971년 12월부터 1972년 6월까지 제9사단을 중심으로 1만 7,000명을 철수한다는 구체적인 제1단계 철군계획을 성안해 외무부에 전달했으며, 6월 19일 외무부는 이러한 입장을 주재국 정부에 전달하도록 주월대사에게 지시했다. 이 문제는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키엠 수상과 김종필 총리 사이에 다시 논의되었으며, 해병 제2여단과 그 지원부대 등 1만명을 철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⁵³⁾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파병국가들도 자국군의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다. 8월 4일 레어드 국방장관은 미 지상군의 전투임무 종료를 선언하면서 향후

52) Memorandum to the Secretary from Marshall Green(4/20/1971), Subject : Courtesy Call by CHOE Kyu-ha,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BRIEFING MEMORANDUM, Box #2423.

53) 이 합의에 따라 8월 16일 주월한국군 부사령관과 남베트남군 총사령부 참모장 사이에 제1단계 철수에 합의하는 각서가 교환되었다. 한국외교문서, '주월 국군 철수 관련 일지(외무부 동남아 2과, 작성일자 미상),' "주월남 한국군 철수, 1973(마이크로필름 번호 G-003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주월한국군사령부, 『越南戰 綜合研究(1974)』, pp. 47-48.

미군은 공군력과 포격에 의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함으로써 1972년 6월 이후 4만 6,000명의 지원부대만이 남베트남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8월 18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수개월 이내에 모든 전투 부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1971년 말 또는 1972년 2월이 되면 한국만이 대규모로 전투부대를 잔류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정부로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⁵⁴⁾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8월 18일 1972년 말까지 모든 부대를 철수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으며, 국방부는 구체적인 제2단계 철수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10월 14일 국방부는 추가 철수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무부에 송부했는데, 국방부는 제1단계 철군이 1972년 4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1972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나머지 3만 7,860명을 철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철수시기가 남베트남과 합의한 제1단계 철군계획과 중복되어 남베트남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97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철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주월미군의 철수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한국군도 조기에 철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⁵⁵⁾

그렇지만 더 이상 제2단계 철수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두

54) 닉슨 정권이 출범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참전국의 병력규모는 아래와 같다.

연도	한국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1969	48,8690	11,568	7,672	189	552
1970	48,537	11,586	6,763	77	441
1971	45,700	6,000	2,000	50	100
1972	36,790	40	130	50	50

Robert M. Blackburn, *Mercenaries and Lyndon Johnson's "More Flags": The Hiring of Korean, Filipino and Thai Solders in the Vietnam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1994), p. 159.

55) Stanley R. Larsen and James L. Collins, Jr.(1975), p. 103; 한국외교문서, '주월 국군 철수 관련 일지(외무부 동남아 2과, 작성일자 미상)', '第2段階 凱旋門計劃(국방부, 작성일자 미상)', '주월남 한국군 철수, 1973(마이크로필름 번호 G-003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가지이다. 하나는 1971년 7월 닉슨의 중국방문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한국은 물론 미·일 등 서방국가들과의 교류와 접촉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하면서 한·미 간에 마찰이 심화되어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⁵⁶⁾ 다른 하나는 철수하는 주월한국군 장비의 소유권과 비용, 그리고 국내에서의 운용방안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정세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미국이 주월한국군에 제공한 장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철수하는 한국군의 장비를 남베트남군에게 이양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은 미 소유권 장비를 최대한 휴대하고자 했던 것이다.⁵⁷⁾ 1971년 7월 1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래혁 국방장관은 레어드 국방장관에게 주월한국군이 귀국하면 해병 여단과 육군 1개 사단은 해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월한국군이 미국 소유의 장비를 휴대하고 귀국할 경우 이 장비들은 한·미 간에 합의한 15억 달러 규모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레어드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⁵⁸⁾ 이 문제는 박원근 합참 본부장과 스미스 주한유엔군사령부 참모장을 수석 대표로 한 한미군사실무자회의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9월 25일 합참은 한국군 병력 수준, 복귀 부대의 국내 운용 방안, 장비 소유권, 철군 병력에 대한 수송 지원 및 해외지원비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담은 주월한국군 철군에 관한 합의각서 시안을 미국측에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56) 이 시기의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홍석률,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제44집 2호, 2004)를 참조.

57) 『派越韓國軍戰史(1972.1~1973.3) 第十卷』, p. 432.

58) Memorandum for the Record(7/14/1971), Subject : Secretary Laird's Private Meeting with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JUNG Nae Hyuk, Republic of Korea- July 13, 1971, Box #1862.

10월 8일 첫 번째 한미군사실무자회의에서 한국측은 주월한국군의 최초 병력 철군 일자가 12월 1일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철군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11월 중순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국 측 시안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스미스 수석대표는 시안에 포함된 내용이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밖의 것이라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그 대신 스미스는 병력수준, 장비 및 재정문제를 담당하는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⁵⁹⁾ 이후 10월 22일(2차), 11월 30일(3차) 및 12월 22일(4차) 세 번에 걸쳐 협의를 거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 11월 6일 한국과 남베트남 정부는 동시에 제1단계 주월한국군 철군계획을 발표했으며, 12월에 시작된 제1단계 철수는 이듬해 4월에 완료되었다.

4. 미중화해, 북한의 평화공세와 주월한국군의 완전 철수

1971년 7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1972년 5월 이전의 적당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다. 닉슨은 동맹국을 희생하면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중국과 손잡았다는 사실에 박정희는 매우 불쾌해 했다.⁶⁰⁾ 또한 로저스 국무장관은 8월 2일 가을에 열릴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유엔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정부

59) 한국외교문서, ‘국방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 작전 952-711(10/6/1971) 제목: 주월군 철군에 따른 대미 협의’, ‘국방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 작전 952-166(2/24/1972) 제목: 한미 군사 실무자 회의록 통보,’ “주월 한국군 재배치에 대한 한미 군사실무위원회 회의록, 제1-4차. 서울, 1971(마이크로필름 번호 G-0021),”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60) 『동아일보』, 1971년 7월 16일; 돈 오버도퍼, 『두개의 코리아』(중앙일보, 1998), p. 29.

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 사이의 관계에 의해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했다. 닉슨 대통령에게 보낸 9월 16일자 친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이 한국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방중 전에 양국 정부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정희는 중국의 목표는 한국과 다른 지역의 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키면서 최근 중국은 북한과 무상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⁶¹⁾

닉슨 대통령의 방중 사전 준비를 위해 키신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은 1971년 7월과 11월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은 그때마다 회담 내용을 북한측에 설명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의 예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했다.⁶²⁾ 중국으로서도 미·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북한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회담 내용을 알려주고 상호간에 정책을 조정했는지 알 수 없다.⁶³⁾ 다만 분명한 것은 이

61) Deptel 174893(9/21/1971), Subject: Kim Yong-sik in Washington, Box #2424;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9/21/1971) from Eliot Jr., Subject: Letter from President Park Chung Hee to President Nixon, *Ibid.*

62) 키신저의 중국 측 카운트 파트너는 저우언라이(周恩来) 수상이었는데, 1971년 7월 키신저와의 회담을 마친 저우언라이는 7월 13일 하노이로 날아가 북베트남 지도부와 회담했으며, 7월 15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다음 날인 16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에게도 회담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키신저가 10월 다시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저우언라이는 회담 후 중국에 와있던 김일성과 회담했다. 毛里和子·毛里興三郎訳, 『ニクソン訪中機密会谈録』(名古屋大学出版会, 2001), pp. 256-257. 7월 9일 키신저와의 첫 번째 회담에서 저우언라이는 주한미군과 주월한국군의 철수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키신저는 이미 2만 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했음을 강조한 뒤 닉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22일 다시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는 저우언라이가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국은 한국의 그런 시도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국동의 긴장완화가 지속된다면 주한미군의 병력은 대단히 적어질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상당한 수의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毛里和子·増田弘監訳, 『周恩来キッシンジャー機密会谈録』(岩波書店, 2004), pp. 32-35, 186-187.

시기를 경계로 북한은 1960년대 후반의 공세적인 대남혁명노선을 버리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71년 8월 6일 시아누크 환영 평양시민군 중대회에서 김일성은 “민주공화당을 포함하여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와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한국이 초보적 접촉을 거절하면 “인민들의 더 큰 증오와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남북간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해 양측 적십자사간에 회담을 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8월 20일부터 남북간에 접촉이 시작되었다.⁶⁴⁾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미국의 언론인, 학자, 재미교포들을 초청했으며 김일성은 서방측 신문기자들도 만났다.⁶⁵⁾ 특히 1972년 1월 10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김일성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시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⁶⁶⁾ 미국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한국정부는 달랐다. 주한미국 대사관 관원들과의 접촉에서 한국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남침하는데 중소의 지원 또는 사전 동의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다. 또한 11월 29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김종필 총리는 최근에 나타난 북한의 의도는 ‘명백히 공격적(clearly aggressive)’이며 외부의 지원 없이

63) 홍석률(2004), p. 35.

64) 『김일성 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32. 남북적십자회담을 거듭하는 동안 한국은 정치회담을 북측에 타진했으며, 이는 1972년 5월 이후라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부수상의 상호 방문으로 이어졌고 7월 4일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시기의 남북대화 과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고찰은 박건영·박선원·우승지,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2003년 제9권 4호).

65) 홍석률(2004), p. 36.

66) 『김일성 저작집 26』, p. 45.

1년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다음 날 유재홍 국방장관도 북한이 호전적인 ‘20일 단기 속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보하고 방위력 증강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⁷⁾

그러나 한국정부의 북한 위협론에 대해 미국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1971년 9월 23일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한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와 자유세계 사이의 최전선의 상징이 아니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주변 4대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주변 강대국들도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1971~75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위협은 축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⁶⁸⁾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12월 2일 국무부가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무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방위력 약화를 강조하는 한국측 주장이 북한의 모험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의회와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의도와 주장에 대해 국무부와 워싱턴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한국정부 고관에게 전달할 때가 되었다”면서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한다면 미국은 한국정부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⁶⁹⁾

북한의 위협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인식차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10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가입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는데, 11월 15일 유엔가

67) 이에 대해 『동아일보』 12월 1일자 사설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북한 위협론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mbtel 7004(11/18/1971), Subject: North Korean Threat-A Refinement, Box #2421; Embtel 7269(12/1/1971), Subject: ROK Official Warn of North Korean threat: Donga Ilbo has questions, *Ibid.*

68) Airgram-336(9/23/1971), Subject: Economic Military Analysis and the Modernization Plan, Box #1862.

69) Deptel 218011(12/2/1971), Subject: ROK Emphasis on North Korean threat, Box #2421.

입 후 첫 번째 총회연설에서 중국의 차오관화(喬冠華) 유엔주재 수석대표는 한국문제에 관해 유엔이 채택했던 결의를 무효화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를 해체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⁷⁰⁾ 한국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미국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12월 13일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계획이 없음을 알리는 닉슨 대통령의 친서(11월 29일자)를 전달하러 온 하비브 대사에게 박정희는 중국의 유엔가입 승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했다. 박정희는 중국은 무력통일을 시도하는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안전에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지만, 하비브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갑작스런 비상사태 선언은 미 의회와 여론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⁷¹⁾

이와 같이 한국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던 가운데 12월 9일 주월한국군의 제1단계 철수부대인 해병 제2여단 소속 1개 대대와 그 지원부대 1천여 명이 부산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2단계 철수계획이었다. 12월 22일 주월대사를 통해 한국은 1972년 말까지 모든 부대를 철수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람 외무장관에게 전달했는데, 람 장관은 제2단계 철수문제는 1972년 하반기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12월 24일 외무차관이 주한 남베트남대사를 불러 잔류 병력의 철수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⁷²⁾ 그런데 제2단계 철수계획을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에 통보하고 반응을 살펴보자는 주월한국군사령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정부는 1973년부터 철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했

70) 『동아일보』, 1971년 11월 16일.

71)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① 적십자 회담 등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방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김일성에게 경고하고, ② 국제적인 상황이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평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직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Embtel 7507 (12/13/1971), Box #2426; 박건영·박선원·우승지(2003), p. 78.

72) 한국외교문서, ‘주월 국군 철수 관련 일지(외무부 동남아 2과, 작성일자 미상),’ “주월남 한국군 철수, 1973(마이크로필름 번호 G-003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다.⁷³⁾ 1972년 1월 18일 유재홍 국방장관은 잔류중인 2개 사단을 1973년 말까지 주둔시켜 달라는 남베트남 정부의 공식요청이 있었다며 철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2월 사이공을 방문한 유 장관은 1972년 말까지 평정계획을 지원하고 1973년에 철수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티우 대통령에게 전달했다.⁷⁴⁾

그러나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전후하여 베트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베트남민족해방전선측은 1월 말 티우 체제가 강화되기 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하고 2월 9일부터 춘계공세를 개시했다. 미국은 B52 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폭격을 가했으며 중단했던 북폭도 재개했는데, 이를 구실로 공산측은 파리 평화회담을 중단시켰다. 3월말 공산측은 비무장지대 남측 광트리 성(省)에 대해 대공세를 감행했으며, 북베트남의 정규군도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가했다. 닉슨 대통령은 4월 3일 워싱턴특별행동그룹(WSAG)을 소집하여 B52의 증파를 지시했으며, 미군은 방어적인 반격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북폭을 재개했다.⁷⁵⁾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뒤 파리 평화회담에 참가하고 있던 포터는 공산측이 군사적인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지글리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은 전투상황에 따라 주일미군의 철수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4월 13일 주일한국군사령부는 한국군 전술지역에 대해서도 적의 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날 미 국방부는 공산측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군이 북베트남 정규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발표했다.⁷⁶⁾

이렇게 베트남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한국정부는 주일한국군의 안전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월 4일 유재홍 국방장관

73) 이미숙(2002), pp. 113-114.

74) 『동아일보』, 1972년 1월 18일; 『越南戰 綜合研究』, p. 49.

75) 柳沢英二郎, 『戦後国際関係史 II』(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 1977), pp. 293-294.

76) 『동아일보』, 1972년 4월 14일.

은 주한유엔군사령관에게 주월한국군의 안전을 위한 6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으며,⁷⁷⁾ 칠레에서 열리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참석하는 김용식 외무장관이 귀로에 닉슨 대통령과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로저스 국무장관은 김용식의 면담은 주월한국군 두 개 사단이 1972년 말까지 주둔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외무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적인 요청은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면담요청을 받아들여도록 닉슨 대통령에게 건의했다.⁷⁸⁾ 4월 26일 김동조 주미대사와 헤이그 안보담당 부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닉슨 대통령과 회담한 김용식 장관은 남베트남에서 전투가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정부는 주월한국군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월미군의 철수 후 한국군에 대한 헬기 지원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했을 때 제공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국군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닉슨은 북베트남 정규군에 의한 군사적 위협은 아시아 반공국가들에 대한 도전이며, 지금은 전쟁에 참가한 모든 자유주의국가들이 북베트남의 침략을 패퇴시켜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군의 계속 주둔의 필요를 강조했지만, 주월한국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쳤다.⁷⁹⁾

미국은 북베트남의 공세가 성공할 경우 한국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나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주월한국군의 작

77) 6개항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2개 전투여단 규모의 미지상군의 남베트남 계속 주둔, ② 적절한 근접항공지원의 보장, ③ 4개 헬기중대 및 기타 일반지원의 보장, ④ 적절한 군수지원의 보장, ⑤ 비상 사태 발생시 주월한국군의 해·공로 수송 보장, ⑥ 재배치 조정에 따른 지원 보장 등이었다. 이미숙(2002), p. 116.

78) Memorandum for the President(4/13/1972), Subject: Appointment for ROK Foreign Minister Kim Yong Sik, Box #2424.

79) Memorandum for the President's File, from Major General A. M. Haig, Jr., Subject: Meeting with Foreign Minister KIM Yong Sik of South Korea on April 26, 1972, Box #2423.

전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비브 대사는 이것은 1972년 말까지 주둔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한국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5월 13일 국무부의 브라운 부차관보가 서울을 방문해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고관에게 한국군 2개 사단의 철수를 연기하도록 재차 요청하자 한국 측은 1972년 말까지 주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비브 대사는 그런 약속은 ‘어길 수 없는 (iron-clad)’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베트남과의 비밀교섭이나 가까운 장래의 베트남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이나 병력문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과 솔직하게 논의해야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에 건의했다.⁸⁰⁾

그렇지만 미국이 지상군을 철수하고 공군력만으로 남베트남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주월한국군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외국군이 되길 바라지는 않았다. 한국정부는 5월 15일 서울에 있는 미국과 남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1973년 1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주월한국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사이공의 유양수 대사는 6월 5일 남베트남 외무장관에게 2단계 철수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국방부로부터 철군 준비를 지시받은 이세호 주월한국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8월 말까지 철군을 담당할 참모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7월 31일과 8월 1일에는 월남군 총참모장과 주월미군사령관을 방문해 한국군의 철수방침을 정식으로 통고했다. 남베트남 정부는 1개 사단은 1973년 7월부터 철수하고 나머지 1개 사단은 12월 31일부터 철수하기를 희망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8월 27일자 국방부 훈령(72-140호)과 주월미군사령부(MACV) 작전계획(J211A)에 입각해 197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철수를 완료한다는 철수계획을 작성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용식 외무장관도 9월 29일 워싱턴의 프레스 클럽 초청 연설에서 “수개월 안에 주월한국군의 철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남베트남 외무성 대변인은 남베트남 정부는 한국군

80) Embtel 2869(5/19/1972), Subject : Korea and Vietnam, *Ibid.*

의 철군 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없다고 말해 한국정부의 철군통고에 사실상 동의했음을 시사했다.⁸¹⁾

한국정부가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배경에는 공산측의 준계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반격할 수 있을 만큼 남베트남군 전력의 향상되었다는 판단도 작용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의 평화회담이 예상외로 진전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7월 중순 70일 만에 파리 평화회담은 재개되었는데 라오스에서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문제에 관여했던 국무부의 설리번 부차관보가 북베트남과의 비밀회담에 참가하면서 급진전을 보였던 것이다. 10월 26일 북베트남은 성명을 통해 군사와 정치문제를 분리하는 미국 방식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 즉, 미국은 북베트남과의 평화회담에서 주월미군의 철수와 미군포로 석방문제를 남베트남의 정치문제와 분리해 다뤄 왔는데, 국제적인 감시기관의 감독 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사이공 정권과 민족해방전선 또는 임시혁명정부가 베트남의 장래에 대해 협의하자는 미국측 제의를 북베트남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북베트남군이 확실하게 남베트남에서 철수해 북위 17도선을 실질적인 남·북베트남의 국경으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북측이 거절하면서 약간의 곡절을 겪어야 했다. 미국이 전면적인 북쪽을 재개하고 북베트남을 압박하자 북베트남은 미군철수와 임시혁명정부의 합법화를 우선하고 티우 대통령의 사임과 사이공 정권의 해체 요구를 철회했으며, 이로써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전격적으로 체결되었다.⁸²⁾

파리 평화회담이 본격화되면서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이미 11월 11일 휴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철수한다는 주월한국군 복귀계획(일명 판문점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했으며, 그간 남베트남군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던 한국군 작전지역 인수인계문제도 12월 2일 한국군이 제시한 진지 인계계획에

81) 『조선일보』, 1972년 6월 6일; 『동아일보』, 1972년 9월 30일; 『越南戰 綜合研究』, pp. 49-52, 1316; 『派越韓國軍戰史(1972. 1~1973. 3) 第十卷』, p. 440.

82) 松岡完(2001), pp. 49-50.

남베트남군이 동의함으로써 타결되었다.⁸³⁾ 그러자 외무부도 1월 25일 이러한 철수계획에 따라 남베트남에 남아있던 한국군을 3월 29일까지 모두 철수한다는 각서(Aide-Memoire)를 남베트남 정부와 미국정부에 전달하도록 사이공과 워싱턴 주재 대사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월대사는 1월 27일 오전 남베트남 외무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전달했으며, 티우 대통령은 29일 주한대사를 통해 “베트남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용감한 기여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서한을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냈으며,⁸⁴⁾ 다음 날인 1월 30일 주월한국군 선발대가 수원 공군기지를 통해 귀국했다.

제1단계 철수와는 달리 주월한국군은 모두 항공편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대한항공은 자사의 항공기로 1만 6,500명의 주월한국군을 수송하기를 희망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는 미국 국적기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 국방부 규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⁸⁵⁾. 본대는 2월 3일부터 11개 제대로 나뉘어 귀국했으며 후발대가 3월 23일 탄손누트 공항과 사이공항을 각각 출발함으로써 한국군의 철수는 완료되었다. 장비는 한·미 간의 합의각서(1972년 1월 21일자)에 따라 일부는 미군에 반납하고 일부는 남베트남군에게 인계했으며, 3,000만 달러 이상의 장비와 물자를 휴대하고 귀국했다.⁸⁶⁾

83) 『越南戰 綜合研究』, p. 52.

84) 한국외교문서, ‘문서번호 아이720- 제목: 월남 종전 협정 서명에 따른 주월 한국군 철수 조치(시행일자: 73.1.25) 및 첨부물: 월남정부에 전달할 각서(안),’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 문서번호 WVN-0152,’ ‘외무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문 문서번호 WUS-0121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문서번호 VNW-01105,’ ‘외무부 보고 사항 문서번호 외아이720-(73. 1. 29) 제목: 우리나라의 월남 지원에 감사하는 “티우” 월남 대통령의 대통령 각하 앞 공한,’ ‘주월남 한국군 철수, 1973(마이크로필름 번호 G-003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85) 한국외교문서, ‘KAL의 派越 國軍 航空 輸送方案(작성일시 및 작성자 미상),’ ‘외무부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문 문서번호 WUS-01229,’ ‘주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문서번호 USW-02004,’ ‘주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문서번호 USW-02027,’ *Ibid.*

5. 결론을 대신한 몇 가지 추론

한국정부는 1964년 9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을 처음으로 남베트남에 파견한 이후 1965년에 비전투부대 약 2천명과 1개 전투사단을 파병했으며, 1966년에 다시 1개 사단의 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함으로써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또한 인구비로 본다면 미군보다 많았으며,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체결 당시 남베트남에 남아있던 외국군 중에 한국군이 가장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게 보낸 1970년 4월 20일자 친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남북대치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두 개 사단의 전투부대 파병 결정은 주한미군의 베트남전용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2만명의 철수를 저지하지 못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 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월한국군의 조기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 두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다.

1970년 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포터 대사는 한국군의 파병에 따른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군의 용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태국 등 다른 파병국가들은 병력 철수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주월한국군의 철수를 서두르지 않았으며 베트남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가 마무리된 뒤에야 주월한국군의 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정부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정책 변경이나 파리 평화회담의 진척상황을 사전에 한국정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협력적이었다⁸⁷⁾.

86) 이미숙(2002), p. 136; 『越南派兵과 國家發展』, p. 218.

87) 1단계 철수가 완료된 후인 1972년 5월 서울을 방문한 국무부 브라운 부차관보가 남아있던 2개 사단을 1972년 말까지 주둔해 달라고 요청하자 한국정부는 이에 동의했으며, 10

왜 그랬을까? 이러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론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닉슨 정권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하면서 주월한국군의 철수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방위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팜 독트린 발표 이후 한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1969년 8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확인하면서 한국정부는 닉슨 독트린의 적용 지역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1970년 3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보하자 한국정부는 크게 동요했으며, 이후 대미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지원, 감축 후의 주한미군 병력 동결 및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투입 보장 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월한국군의 철수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략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 의회가 행정부의 대외원조를 대폭 삭감함에 따라 한국군 현대화계획조차 큰 차질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미국과 대립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주월한국군 철군과 관련한 미국의 요청은 한국정부의 기본 방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과병시와 달리 한국정부가 유리한 입장에서 대미 교섭에 임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월 닉슨 대통령이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F-5A 전투기 36기를 남베트남 정부에 이전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박정희는 11월 초 18기의 F-4를 한국 공군에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또한 1973년 1월 26일 최광수 국방차관보는 하비브 대사와의 비공식 오찬에서 한국정부는 당초 철군계획보다 철군 규모를 축소하고 평화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60일이라는 철수기간의 종료시까지 많은 병력을 남기는 쪽으로 철군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 체결 1주일 전인 1973년 1월 21일 헤이그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을 서울로 보내 평화협정의 내용과 일정을 전달했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3주가 지난 2월 19일이 되어서야 설리번을 서울에 보내 베트남 상황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설명했을 뿐이다. Embtel 2869(5/19/1972), Subject: Korea and Vietnam, Box #2423; Memorandum for Mr. Henry A. Kissinger(11/17/1972), Subject: Letter from Korean President Park Chung-hee to the President, *Ibid*; Embtel 0497(1/27/1973), Subject: Withdrawal of ROKFVN, Box #2424; 『派越韓國軍戰史(1972. 1~1973. 3) 第十卷』, p. 436.

둘째, 주월한국군의 철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려했을 것이다. 1970년 3월 13일 워싱턴에 보고한 전문에서 포터 대사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군을 유지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물질적인 이익에 있다고 보았는데,⁸⁸⁾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철군에 의한 외화수입의 감소와 더불어 주월한국군의 철군에 따른 외화수입의 감소가 1971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을 것이다. 1961년 약 4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의 수출은 1964년에 1억 달러를 넘었으며, 1965년에 1억 7,500만 달러, 1966년에 2억 5천만 달러, 1967년에 3억 2천만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1960년에 2.3%에 그쳤던 경제성장률도 1964년과 1966년에 각각 8.3%와 13.4%로 급상승했다.⁸⁹⁾ 이러한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것이 베트남과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즉, 베트남 특수였다. 1960년대 한국의 대(對) 남베트남 수출은 총 수출의 5~10%를 차지했으며, 1965년부터 1972년까지 8년간 한국의 베트남 관련 경제활동 수익은 약 10억 2,600만 달러에 달했다.⁹⁰⁾ 이것은 같은 기간 중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외자 총액 10억 8,900만 달러에 필적한 것이었다.⁹¹⁾

셋째, 철수하는 주월한국군의 국내에서의 처리문제와 관련이 있다. 수도사단에 이어 1966년 보병 제9사단이 증파되면서 전방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은 1966년 7월 예비사단이었던 보병 제32사단을 전투사단으로 전

88) 포터는 같은 전문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의심을 갖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 '상징적인 철군(a token withdrawal)'도 가능하기 때문에 베트남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국간의 정책적인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워싱턴에 전했다. Airgrma-131(3/13/1970), Subject: U. S. Assessment- Republic of Korea 1970, Box #2429.

89) Robert Castley, *Korea's Economic Miracle: The Crucial Role of Japan*(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7), p. 88(Table 2. 4), pp. 182-183(Table 5. 14a).

90) 木宮正史, "1960年代韓国における冷戦と經濟開發-日韓外交正常化とベトナム派兵を中心に-", 『法学志林』(제92권 제4호, 1995년 3월), pp. 85-86(특히 <표 6> 참조).

91) 朴根好, 『韓國の經濟發展とベトナム戰爭』(御茶ノ水書房, 1993), p. 39.

환시켰으며, 9월에는 보병 제51예비사단을 창설했다.⁹²⁾ 따라서 주일한국군의 철수로 인해 당시 한국군 병력 실링인 60만을 초과할 경우 미국과의 별도 합의가 필요했으며,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제대시켜야 했다. 또한 대외군사원조가 감소하면서 미국은 기존의 무상원조를 군사판매 차관(FMS)으로 전환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안했으며,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측이 불만을 제기하자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상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기간 연장문제를 검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중의 병력유지비(O&M)를 모두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⁹³⁾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한국군의 철수는 국내에서 추가적인 운영유지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일한국군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철수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넷째, 한국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도 관련이 있다. 1971년 7월 닉슨의 중국 방문이 발표된 후 한국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으며, 이것은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다. 1971년 8월에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비밀정치회담으로 이어져 1972년 7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가져왔지만, 10월 중순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체계가 필요하다는 면서 유신을 선포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월 유신 선포 후 하비브 대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워싱턴은 표면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박정희가 독재의 경향을 드러내면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⁹⁴⁾

92) 『國防史 3』 1961. 5~1971. 12, p. 288.

93) 한국외교문서, ‘면담요지(73. 2. 26) 김동휘 미주국장과 스나이더 국무부 부차관보,’ ‘면담요지(73. 2. 26) 김동휘 미주국장과 스피어스 국무부 정치군사국장,’ “국군현대화 촉진 방안(군원 이관) 1973(마이크로필름 번호 G-002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94) 신옥희·김영호, “전환기의 동맹: 데탕트 시기의 한미안보관계”(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사” 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p. 25; 돈 오버도퍼(1998), pp. 49-52.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미중화해와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이 시기의 한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던 만큼 필자는 주월한국군의 철수과정을 가능한 한 한·미 양국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재조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필 과정에서 자료상의 한계를 느꼈다. 철수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다. 제1단계 철수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한국정부는 1971년 7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발표 이후에는 미·중화해와 북한의 평화공세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또한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 당시 외국군으로서 가장 많이 남베트남에 남아 있었지만 한국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파리 평화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다. 만약 미 지상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파리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북베트남 지상군이 북위 17도선을 넘어 대량으로 남하했었다면 한국군은 지상전투에 휘말렸을 것이고 철수는 지연되고 희생자도 늘어났을 것이다. 더구나 이 시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철수, 미·중화해, 북한의 위협 등을 둘러싸고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던 점은 파리 평화회담이나 베트남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정책 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쨌든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 보다 수준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1차 자료의 공개와 발굴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원고투고일 : 2006. 4. 19,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베트남전쟁, 닉슨 독트린, 주월한국군의 철수, 한미관계, 주한미군의 감축

<ABSTRACT>

Withdrawal Process of the ROK Armed Forces in Vietnam

Cho, Jin-gu

This article is about the examination of process with regard to the withdrawal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rmed Forces from South Vietnam on the basis of the context of rel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Nixon Administration, January 1969, to March 1973. ROK was a second place following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the dispatch of military force and the number of the ROK Armed Forces were more than that of the US Forces, compared total population in each country.

While a close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both countries was established in the mid 1960s through sending of ROK Army with the Johnson Administration's extension policy to intervene in South Vietnam affairs, there were unstable relation and troubles between both countries between 1969 and 1973. The reason was that there were conspicuous different opinions between ROK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concerning several issues such as the reduction plan of the US Forc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Nixon's Doctrine, the modernization of ROK Armed Forces in Korea, reconcili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North Korea's threat to the ROK.

Despite tho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delayed the departure of ROK Armed Forces in Vietnam (ROKFV) from South Vietnam as it had a standpoint to react flexibly to the change of conditions in regard to the Vietnam War. It also had cooperated with the US Government,

even though the US Government did not explain previously the modification of Vietnam Policy and the progress of the Paris peace talks to the ROK Government. There were four reasons as follows; First, the ROK Government emphasized the acquirement of the US Government's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ROK Army and of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the US Forces in Korea despite their partial decrease and rapid dispatch of the US Army in case of emergency, so it did not regard the withdrawal of the ROK Army from Vietnam as a priority. Second, it considered an economic loss after the return of ROKFV. Specifically, the ROK Government had some concerns over the difficulty of foreign capitals acquisition for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plan from 1971 due to the reduction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withdrawal of ROKFV. Third, there was a problem in relation to the return and integration of ROKFV to the ROK. As the evacuation of ROKFV from Vietnam could result in the necessity of an extra budget for sustenance in Korea, the ROK Government opted to postpone the return of ROKFV from Vietnam with the consideration of security for ROKFV. Fourth, the delayed withdrawal of ROKFV from Vietnam was related to the criticism from the US Government in regard to political circumstances in Korea. After Nixon's visiting to China, the US Government did not agree the ROK Government's argument concerning North Korea's threat, while it criticized that the ROK Government applied a North Korea issue as a way for the change of Korean political situation.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negotiate with the US Government in a better position with regard to an issue of ROKFV' withdrawal from Vietnam unlike the period of dispatch in the 1960s.

Key Words : Vietnam War, Nixon Doctrine, Withdrawal of the ROK Forces in Vietnam(ROKFV), The ROK-US relations, Reduction of the Unite States Forces in Korea(USFK)